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부 2023년 5~6월 보도자료(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ls.jsp?PAR_MENU_ID=048&MENU_ID=0403)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임.



I

사회서비스 연결의 힘, 10개 컨소시엄 통해 첫 발자국을 떼다

-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다변화 사업 참여 컨소시엄 10개소 선정 -
- 10개 시·도에서 지역 내 사회서비스 연계·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수행 -
- 사회서비스 공급주체의 건전성과 사회서비스 품질제고의 선순환 기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다변화 사업을 공모하여, 지원한 19개 컨소시엄 중 10개를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컨소시엄: 대표기관과 구성기관 2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제3자 간 연합체

-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다변화 사업은 다양한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간 연계·협력 모델을 발굴·확산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대상자의 다양한 욕구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고 서비스 공급자의 규모의 경제를 통해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 보건복지부는 사업을 신청한 컨소시엄에 대해 1차 서면 심사와 2차 대면 심사를 거쳐 사업 타당성, 목표 적절성, 수행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선정하였다. 선정된 10개 컨소시엄은 서울 등 10개 시·도에서 지난 5월부터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 선정 결과, 청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소시엄이 많았다. 서울은 바우처를 활용한 생활지원 사회서비스, 광주는 건강·금융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One-stop)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도와 경상남도는 자립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교육·교류기회 제공 등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인천, 대전, 울산은 돌봄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의 결합을 시도한다. 인천은 중장년 고위험군, 대전은 경증 치매노인, 울산은 돌봄이 필요한 퇴원환자를 각각 대상으로 하여 영양·건강검진·병원동행 등을 돌봄서비스와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대전과 울산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인지·신체기능 강화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 충청남도, 전라남도, 강원도는 지역적 특성을 살린 공급모델을 시험한다. 다문화가정이 많고 농촌지역이 다수인 충청남도는 노인·이주민을 대상으로, 섬이 많은 전라남도는 도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강원도는 고령의 농촌지역 치매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 이번 사업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민간의 사회서비스 제공자를 육성·지원하는데 적극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10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사업 성과평가 등 정책연구,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지원과 컨설팅, 홍보 등 컨소시엄 성장지원을 수행한다.
- 또한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도 사회서비스원과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계획 대비 추진사항 및 목표 달성 여부 등을 점검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김혜진 사회서비스정책관은 “국민이 개인별 특성에 맞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공자간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사회서비스 공급주체의 건전성과 사회서비스 품질제고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참고 1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다변화 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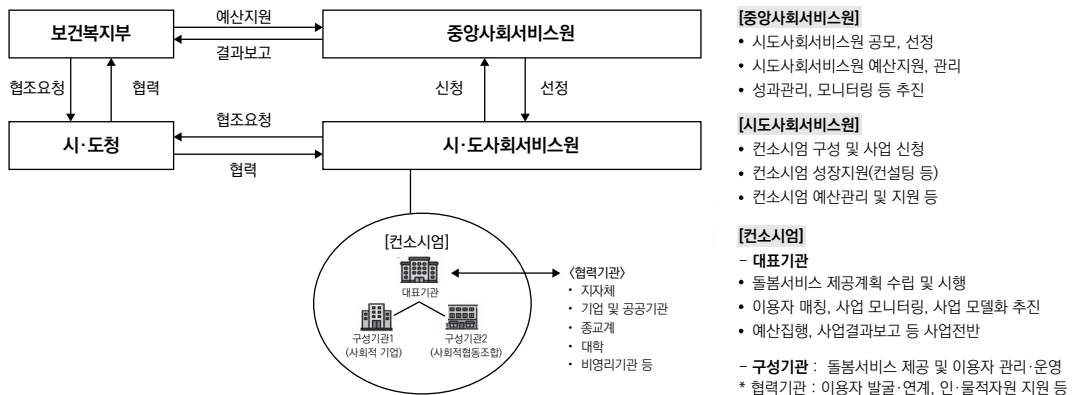
■ 사업목적

- 다양한 이·동종의 공급주체 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확산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연계·협력 모델의 발굴 및 전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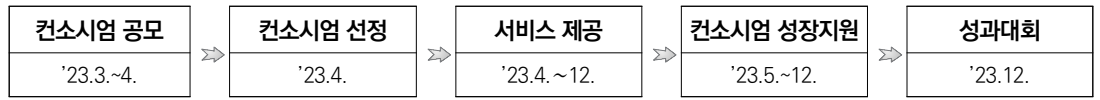
■ 사업개요

- (주요내용) 컨소시엄* 10개소를 공모·선정·지원하여 공동 홍보·구매 등을 통한 규모화, 기업·대학 등 지역 내 다양한 자원 연계·협력
 - * 대표기관 1개소와 구성기관 2개소 이상으로 구성(바우처·사회적경제·민간 제공기관 등)
- (지원내용) 지속가능한 연계·협력 제공모델 개발 등 컨소시엄 사업비 지원 및 시·도사회서비스원 성장지원 등 사업운영비 지원
 - * 각 컨소시엄당 90백만원, 10개소(컨소시엄 80백만원, 시·도사회서비스원 10백만원)
- (성과관리) 전문가 협의체, 실무자 간담회 구성·운영, 성과지표 개발, 만족도 조사, 성과대회 등 성과 관리 및 이용자 지원사례 홍보 등

■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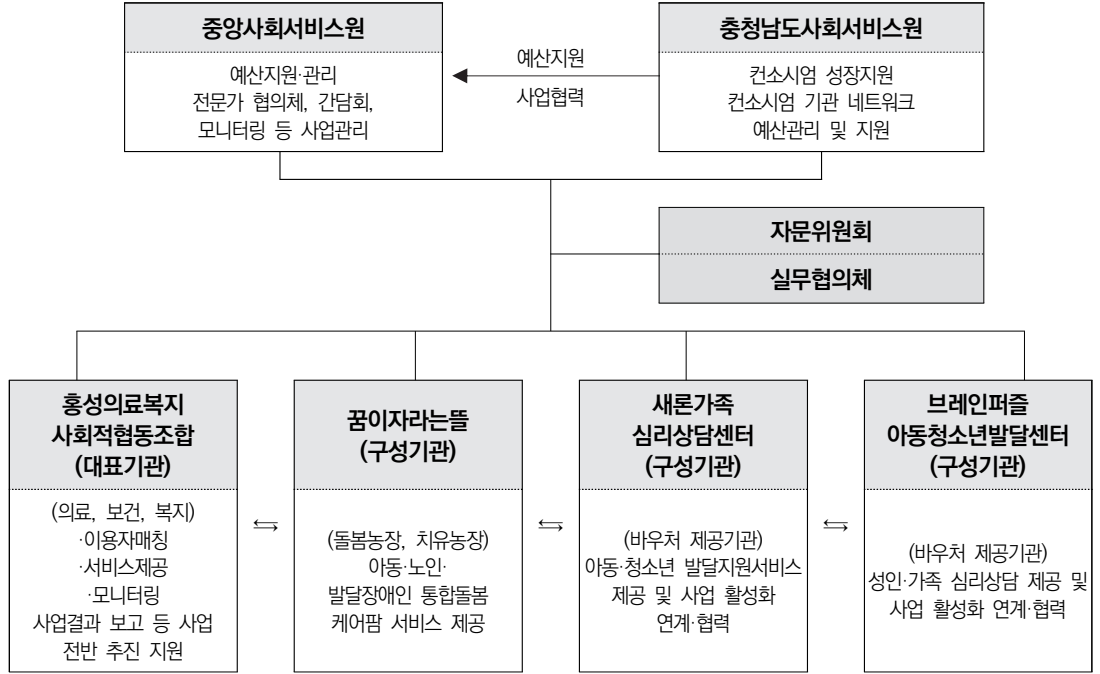
■ 추진일정



참고 2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다변화 사업 예시

■ 충청남도(홍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외 3개소)

- 보건·의료 중심의 농촌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홍동다움)사업
 - (대상) 노인, 발달장애인, 다문화 및 이주민
 - (제공내용) 돌봄·심리·건강관리 등 대상자 맞춤형 통합서비스
- 사업 추진체계



○ 컨소시엄 지원 항목

-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직접 서비스 제공 비용(자부담 비율 각 5%)

* 낙상예방운동, 만성질환영양교육, 심리상담, 발달지원 서비스 등

- (운영) 전담인력 급여, 공동 교육·행사* 등 비용

* 간담회 운영비, 현장견학비, 제공인력 교육 강사비, 건강대회 행사운영비 등

○ 기대효과

- (품질 제고) 인력 공동교육·견학, 간담회, 시·도사서원의 컨설팅 통한 질 제고 기회 부여, 맞춤형 서비스로 이용자 만족도 상승
- (운영 효율화) 이용자 매칭, 통합사례 관리를 통한 서비스 제공 효율화, 공동홍보를 통한 이용자 확보, 전담인력으로 행정부담 감소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0483. 사회서비스정책과, 2023. 05. 04.

II

보건복지부, 미래 의료를 선도할 가상환경 기반 의료기술 개발 지원

- 메타버스, 디지털트윈, XR, 인공지능 등 융합기술 활용하여 가상환경 기반 의료기술 개발 -
- 의료서비스 및 병원 운영 분야 총 10개 연구과제 선정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최근 가상환경 기반 의료기술 및 서비스 혁신을 가져올 「가상환자, 가상병원 기반 의료기술 개발사업(R&D)*」 10개 과제를 선정하였고, '23년에서 '27년까지 475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먼저, 가상환경 기반 의료서비스 분야에서는 의료현장에서 요구되는 미충족 수요 해결을 목표로 ▲가상환경 기반 환자경험가치 제고를 위한 서비스 모델 개발 ▲주요 질환 원격협진 및 교육 모델 개발(뇌수술, 심혈관질환 시술 등) ▲인공지능에 기반한 정신건강서비스 기술 개발 등 7개 과제가 선정되었다.
- 병원 운영 분야에서는 현실 의료기관을 가상환경에 구현한 가상병원 기반 ▲진료 프로세스 최적화 ▲감염병, 재난사고 등 긴급상황 대응 ▲의료자원 효율화(병동·인력배치 등) 시뮬레이션 기술개발 등 3개 과제가 선정되었다.
-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 연구개발 전문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과제 관리·평가 등을 통해 성과 도출을 지원하고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기존 의료서비스의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한 신의료기술 혁신이 실현될 것”이라며, “의료 메타버스 조기 성공모델 발굴을 통해 국가 기술 경쟁력 제고 및 글로벌 시장 선도,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참고 「가상환자·가상병원 기반 의료기술 개발」사업 개요

■ 추진배경

- 전세계적으로 메타버스 플랫폼 산업을 경제 新성장 동력으로 추진 중
 - 특히, 의료분야 메타버스 활용은 의료 혁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메타버스 개념 및 요소기술〉

- (개념)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을 디지털 세계로 확장하여 가상세계 속 경제, 문화 등 활동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시스템
- (요소기술) 인공지능, 확장현실(XR), 디지털 트윈 등 물리적 상황을 디지털화하는 다양한 요소기술을 통합·활용하여 메타버스 구현

- 메타버스 주요 기술 수준은 전세계적으로 초기단계로, 국내 기술 수준은 선도국가와 격차가 크지 않은 상황*
 - * 메타버스의 주요 요소기술 중 하나인 국내 디지털 트윈기술 수준은 선도국가인 미국(100%) 대비 82.3% 수준이며 기술격차는 1.4년('19, IITP)
 - 국내 메타버스 기업은 현재 네이버, 카카오 등을 제외, 대부분 스타트업 기업 위주로 형성되어 있어 기술개발 지원 필요('21, STEPI)

■ 사업내용('23~'27년, 475억 원)

- (가상환경 기반 의료서비스 기술개발) 임상 현장에서 요구되는 미충족 의료수요(Medical Unmet Needs) 중심 가상환경 기반 의료서비스(예방, 진단, 치료, 관리 등) 모델 발굴 및 기술 개발
 - * 7개 과제 연간 10억 원 이내 지원
- (가상환경 기반 병원 운영 기술개발) 병원 운영 효율성(진료·행정 지원, 물류 관리, 인력 배치 등) 및 접근성 향상(재난상황 대응 등) 중심 가상환경 기반 병원 운영 모델 발굴 및 기술 개발
 - * 3개 과제 연간 10억 원 이내 지원

■ 기대효과

- 의료 메타버스 조기 성공모델 시험을 통해 국가 기술 경쟁력 제고 및 글로벌 시장 선도,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 조성 기여 등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0525.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2023. 05. 16.

III

보다 스마트한 관리로, 국민·기초연금 부정수급 막는다

- 공적자료 연계를 확대하여 사망 미신고 사례 등 부정수급 조기 적발 -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협업 강화를 통한 정밀한 확인조사 실시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민·기초연금 재정 누수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자녀가 모친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2년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수령한 사례가 국민연금 확인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후,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국민·기초연금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강구해왔다.
- 2022년 부정수급 발생 건수는 국민연금 22건, 기초연금 54건으로 전체 수급자 수 대비 그 규모는 크지 않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수급자의 사례는 연금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이를 사전 예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우선, 보다 스마트한 부정수급 관리를 위해 기존 급여지급DB, 부정수급 사례 등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부정수급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비대면 조사시스템' 활용을 확대하여 조사를 더욱 효율화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개선한다.

- 이와 함께, 국민연금은 20개 기관 70종, 기초연금은 25개 기관 84종의 외부자료를 입수하여 수급자의 인적변동 확인, 확인조사 대상자 선정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이에 더해 국민연금은 건강보험 건강검진자료 등을, 기초연금은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자료를 추가 연계하여 보다 정밀한 확인 대상자 선정 등 적정 급여 수급 확인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 한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관리·조사체계의 협업을 강화한다. 2022년 말 기준 국민-기초연금 동시 수급자*는 약 290만 명이다. 그러나, 국민-기초연금 간의 급여 사후관리체계가 분리되어 운영됨으로써 각각의 확인조사 결과가 긴밀하게 연계되지 못하여 동일 대상자 중복 조사 등의 문제가 있었다. 향후에는 확인조사 결과를 상호 공유하고, 중복되는 조사대상자는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보다 높이고 수급자의 중복조사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 국민연금-기초연금 동시수급자: ('20) 238만 명 → ('21) 265만 명 → ('22) 290만 명

- 부정수급 주요 유형 등의 조사 경험과 노하우가 공적연금 또는 각종 사회보험 유관기관 간에 상호 공유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조사 실무협의체*', '보험조사 실무협의회**' 등 기 구성된 소통기구를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활성화한다.

* 국민연금·건강보험·근로복지·공무원연금·사립교직원연금·국군재정관리단 부정수급 담당자로 구성
** 금융위, 경찰청,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 심평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실무자로 구성

- 국민연금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조사 전문성 등 역량 제고를 위해 현장 사례 중심 부정수급 교육을 실시하고, 증가하는 수급자 규모를 고려하여 전담인력 확충을 추진하는 등 관련 인프라도 강화할 방침이다.

- 향후 이와 관련하여 외부자료 연계 및 국민-기초연금 간 자료 연계를 위한 국민-기초연금 관련 법령 개정, 국민-기초연금 간 합동조사, 부정수급 예측 모형 개발, 비대면 조사 시스템 활용 확대 등을 올해 하반기 중으로 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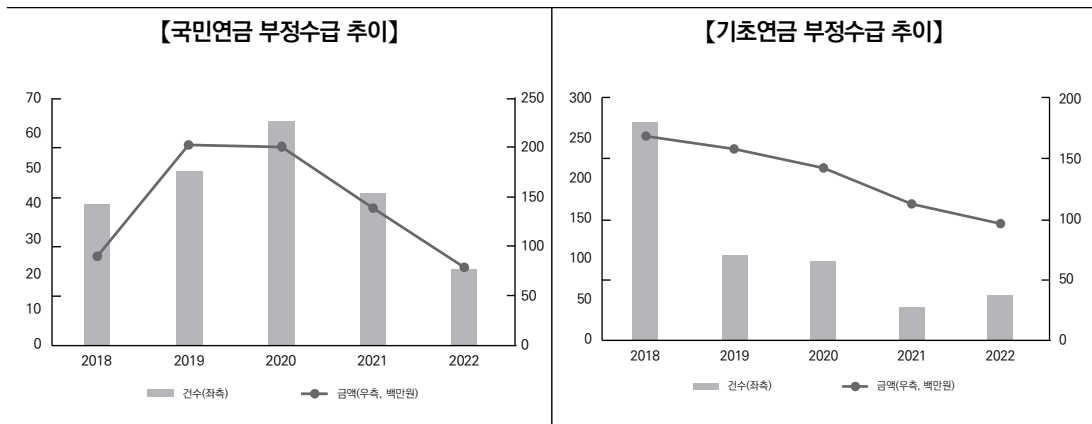
진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국장은 “국민·기초연금은 국민이 맡겨주신 국민연금보험료와 납부하신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제도인 만큼 더욱 책임감을 갖고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해 신뢰받는 연금제도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국민·기초연금 부정수급 발생 및 관리 현황

■ 부정수급 발생 현황

- '22년 기준 국민연금 부정수급 22건(건당 평균 3.6백만 원) 발생,
기초연금 부정수급 54건(건당 평균 1.8백만 원) 발생



■ 부정수급 관리 현황

- 인적·소득재산 상 변동 사실 발생시 관계기관 공적자료 연계*를 통해 수급권 변경 조치 등을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확인조사 실시 중

*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20개 기관, 70종 공적자료 연계 활용,
(기초연금) 행복e음을 통해 지자체에서 25개 기관, 84종 공적자료 활용

〈 확인조사 현황 〉

구분	국민연금 확인조사	기초연금 확인조사
조사대상	건보 무진료자(사망의심) 등 32개 유형, 보험사기 관련자 등 8종 기획조사	고령자(사망의심), 사실이혼 등 6종, 지자체 요청에 따른 공단 수시조사
조사규모	연간 67,000건(수급자의 1.2%)	연간 36,155건(수급자의 0.6%)
담당인력	국민연금공단 126명 (공단지사 112개소)	국민연금공단 102명, 지자체 공무원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0600. 국민연금정책과. 2023. 06. 01.

IV

언제 어디서든, 건강정보를 확인·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보건의료 환경 조성한다

- 2023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개최(6.9) -
- 올 하반기부터 건강정보 고속도로 본사업 실시 -
- 상호운용성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고시 개편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9일(금) 15시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 관 주재로 2023년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이하 '데이터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데이터위원회는 의료정보 및 보건의료데이터 정책 추진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2022년 구성되었으며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3 건강정보 고속도로 추진계획 〉

■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여러 기관의 표준화된 의료데이터를 본인에게 제공하고, 본인 동의를 기반으로 원하는 곳

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 2022년 245개소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실증을 검증하고, 2023년 하반기에 600여 개의 의료기관을 플랫폼에 추가로 연계하여 표준화 데이터 12개 항목*에 대한 의료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12개 디지털 표준화 항목>

① 환자정보	④ 진단내역	⑦ 영상검사	⑩ 수술내역
② 의료기관정보	⑤ 약물처방내역	⑧ 병리검사	⑪ 알러지 및 부작용
③ 진료의정보	⑥ 진단검사	⑨ 기타검사	⑫ 진료기록

* 영상검사의 경우 현재 검사일시·검사소건 등만 확인가능 하나, 향후 제공내용 확대 계획

- 또한,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정보를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연계하여 추가로 제공한다.

* 건보공단(진료이력, 건강검진이력), 심평원(투약이력), 질병청(예방접종이력)

-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제공되는 본인의 의료정보는 본인 휴대폰에 설치된 ‘나의 건강기록앱’을 통해 조회와 저장이 가능하고,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을 때 뷰어 형태로 의료진에게 본인의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다.

- 향후에는 법률 제정*을 통해 본인 동의 시 의료기관 외 제3자에게도 정보를 직접 전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정보 고속도로 기반의 공공기관 연계 서비스 등 다양한 활용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디지털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발의('22.10.7, 강기윤의원)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의료기관 간 의료데이터 교류와 전송이 쉽도록 보건의료 데이터 표준 고시 개편을 추진한다. 현행 의료용어 중심으로 마련된 보건의료데이터 표준을 데이터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중심으로 개편한다.

- 그간 보건복지부는 국내 보건의료 용어표준체계(KOSTOM)*를 개발하여 2014년부터 매년 고시해 왔으나, 국내 표준 및 용어 중심 표준으로 한정되어 의료현장의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 (Korea Standard Terminology Of Medicine) 국내에서 개발한 보건의료용어분류체계

- 이에, 데이터 활용환경에 맞추어 핵심교류 데이터를 정하고, 국제전송기술표준(FHIR)*을 도입하여 의료정보의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표준화 전략을 추진한다.

* (Fast Healthcare Interoperability Resources)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의료정보 교류를 위한 미국 HL7(비영리단체)의 국제전송표준체계

- 구체적으로, ① 의료정보 교류가 필요한 항목과 적용할 표준용어분류체계를 국가단위로 정의하고(KR CDI), ② 전송표준 상세규격(KR Core)를 개발하여 핵심교류데이터를 구현하며, ③ 개인생성건강데이터(PGHD) 활용 가이드라인 개발·고시하고, 주요 데이터 사업*에서 단계적으로 국가 표준을 적용하는 등 의료데이터 사업 간 정합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건강정보 고속도로, EMR 인증제, 진료정보교류, 보건소 건강관리사업 등

- 핵심교류데이터(KR CDI*): 의료정보를 공통된 의미로 교환하고 상호이해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등 교류 시 필수적인 항목·용어를 정의한 것

* Core Data for Interoperability

- 핵심공통상세규격(KR Core): 핵심교류데이터를 FHIR 서버로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상세 규격을 정의한 기술문서 개발

- 개인생성건강데이터(PGHD*): 웨어러블 기기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개인(환자)이 작성·기록·수집하는 증상, 생체 인식 데이터, 라이프로그 등 데이터

* Patient(Person)-Generated Healthcare Data

- 이를 위해 2022년 12월 민·관이 협력하여 의료기관·병협·의협·산업계·공공기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보건의료표준화 추진단을 구성하여 표준개발·검증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폭넓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하반기에 ‘(가칭)보건의료데이터 표준’을 고시할 예정이다.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위원회 모두 발언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 가치는 환자와 가족, 나아가 모든 국민의 보건 증진”이라고 밝히며, “국민이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든 건강정보를 확인·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024.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2023. 06. 09.